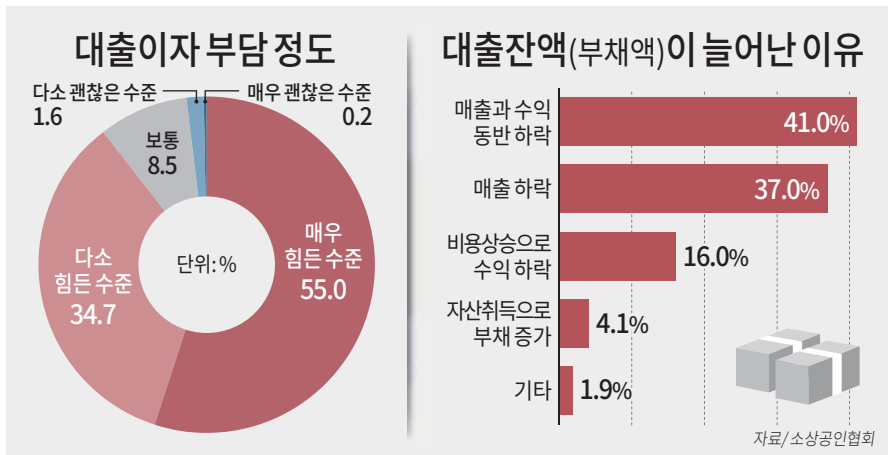
소상공인 90% "대출 이자로 힘들다"… 60%는 빚 증가

소상공인연합회, 1430명 조사
매출·수익 하락 '은행빚'으로 해결
가장 필요한 금융정책 사항으론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행' 꼽아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대출 이자 부담때문에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1년전에 비해 부채가 더 늘었으며 평균 부채는 3000만~1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이같은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달 9일부터 14일까지 소상공인 143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를 실시해 16일 내놓은 분석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 55%는 '매우 힘든 수준', 34.7%는 '다소 힘든 수준'으로 답해 전체의 89.7%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통'은 8.5%였다.

'1년 전과 비교한 부채 증감 수준'에 대해선 31.1%가 '매우 늘어남', 32.3%가 '다소 늘어남'이라고 답해 응답자의 63.4%가 대출이 증가한 모습이다. 반면 '줄었다'는 10.8%에 그쳤다.

'대출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선 41%는 '매출과 수익 동반 하락'을, 37%는 '매출 하락'을 각각 꼽아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떨어져 은행빚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응답자 가운데 '적자를 봤다'는 소상공인은 36.2%로 집계됐다. 또 월평균 영업이익이 '100만원 미만'도 13.8%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가운데 '정책자금 대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81.1%, '가계 대출로 자업자금을 조달'했다는 답변은 90.8%로 나타나 정책자금이 부족해 결국 가계대출에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97.4%는 여전히 부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채액은 '5000만~1억원'이 27.6%로 가장 많았고, '3000만~5000만원'이 22.5%, '3000만원 미만'은 15.8%였다. 부채가 2억원이 넘는 소상공인도 15%에 달했다.

아울러 대출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39.8%), '대출한도 제한에 다른 추가대출 불가'(36.2%) 등이 주를 이뤘다.

정부의 금융정책 중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대출 시행'이 47.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지난 1월 시행한 2% 금리의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융자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나흘 만에 마감이 됐다"면서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삼중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 경영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대부분은 대출로 버티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대출 확대와 금융권의 가산금리 동결 또는 인하 등 종합적인 금융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2970억 녹색보증 추진

산업부, 오늘부터 신청 접수 시작
중소 100억원·중견 200억원 한도

정부가 중소·중견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올해 297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녹색혁신금융(녹색보증) 사업을 1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탄소저감효과가 우수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신용·기술평가뿐만 아니라 탄소저감 능력을 추가로 평가해 보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2021년 3643억원, 2022년 2818억원에 이어 올해는 297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해 총 9431억원 규모 보증을 공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금을,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에서 중소기업은 100억원, 중견기업은 200억원 이내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작년까지는 발전기업은 '사업용' 발전기업에게만 보증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자가용' 발전기업까지 포함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올해는 12개월로 변경한다. 사업자가 보증기관에 확인서를 제출할 때, 유효기간이 일찍 만료돼 보증승인이 곤란한 문제와 확인서 재발급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작년까지는 발전기업, KS인증제품 제조기업, 관련 특허보유 기업이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기업이었으나 올해는 관련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보유기업'도 확인서 발급절차 생략기업으로 포함해 보증서 발급 소요시간이 단축된다.

산업부는 "탄소저감 기술력은 보유했지만 담보능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리스크를 일부 분담하고 있다"며 "사업을 통해 녹색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기업이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보증기관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16일 이후 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을 통해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이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보-한국지식재산보호원 中企 특허분쟁 대응 '맞손'

지식재산 보호분쟁 등 협업 진행

기술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추가로 나선다.

기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지난 15일 부산에 있는 기보 본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과 보호원의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연계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전략과 분쟁관련 금융비용 지원 ▲지식재산공제사업 우대혜택 제공 및 홍보 ▲기술보호사업 지원관련 상호협력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정책자금 신청 방식 '전수 접수'로 개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정책자금 신청 방식을 오는 3월20일부터 전면 개편한다.

16일 중진공에 따르면 그동안 선착순 방식으로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신청·접수 절차를 운영해온 결과 지역에 따라 조기마감 되는 경우가 발생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었다.

중진공은 이를 개선하기위해 매달 접수기간 내에 희망하는 모든 기업이 정책자금을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 전수 접수방식으로 개편해 고객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혁신성장분야, 고용창출, 수출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비닐하우스 필름 '담합'… 과징금 10억

일신하이폴리 등 11개 제조사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일신하이폴리 등 11개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교육 실시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68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민이 구매하는 비닐하우스 필름 거래는 크게 단위농협을 통해 이뤄지는 계통거래나 자체거래와 대리점, 농자재 상사, 인터넷 등을 통해 이뤄지는 민수거래로 구분된다.

계통거래와 자체거래는 11개 제조사들과 농협경제지주가 매년 초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계통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반해 민수거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비닐하우스 필름 시장은 만성적 공급과잉으로 업계간 경쟁이 치열한데, 농협경제지주는 2016년경부터 비닐하우스 필름 계통거래 가격 인하를 추진했고, 2018년에도 계통가격을 전년 대비 5% 인하하려 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최저임금 상승과 유가 인상 등을 이유로 계통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채소·과일·화훼류 재배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필름의 가격 결정과 영업 과정 등에서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농산물의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표고버섯 자외선 처리로 저장기간 확대

농진청 연구, 부패발생 억제

농촌진흥청이 생표고버섯에 자외선을 처리하면 부패 발생을 억제해 저장기간을 늘리고 기능 성분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연구 끝에 밝혀냈다.

이에 따라 자외선 처리 기술을 적용해 미생물 침입으로 상하기 쉬운 생표고버섯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고 저장,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기능 성분의 함량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16일 농진청에 따르면, 연구진은 수확한 표고버섯 온도를 1.5℃ 정도로 낮추고 버섯 갓이 위를 보도록 쌓은 뒤 저농도 자외선을 7킬로줄(kJ) 강도로 쏘였다.

그 결과 저온(1℃)에서 30일 저장한 뒤에도 부패균 감염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했다.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표고버섯은 상온에서 3일, 저온에서 24일 저장할 경우 부패균 감염이 확인된다.

또, 자외선을 180초간 처리한 뒤 1℃에서 30일 저장한 표고버섯의 상품성은 약 90%로,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표고버섯(70%)보다 20%포인트 높았다.

자외선 처리는 표고버섯의 기능 성분 유지에도 도움이 됐다. 자외선을 쏘인 뒤 상온에서 5일 저장한 표고버섯은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표고버섯보다 식물성 콜레스테롤인 에르고스테롤 함량이 2배 이상 높았다. 자외선을 쏘인 뒤 저온 저장했을 때는 에르고스테롤 함량이 최대 30일까지 유지됐다.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식이성 항산화제인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도 자외선을 처리했을 때 높았고, 상온 저장했을 때 차이가 벌어졌다.

/세종=한용수 기자